

현재, '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심판 변론 오는 10일 재개

선고 2시간 앞두고 돌연 재개 결정
10일 변론기일에 사유 밝힐 예정
崔 대행 변론재개 요청 고려된 듯
한덕수 헌법소원도 선고기일 연기

헌법재판소는 3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 대한 변론을 오는 10일 다시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로 예정됐던 선고 일정이 미뤄지면서, 현재 '9인체제' 완성 여부도 추후 결정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공지를 통해 해당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변론을 오는 10일 오후 2시에 재개한다고 밝혔다.

당초 현재는 이날 오후 2시 우원식 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과 헌법



헌법재판소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헌법소원과 권한쟁의 사건 선고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뉴스

소원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선고를 2시간 앞둔 시점에 돌연 변론기일을 재개하기로 결

정했다.

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평의를 열어 선고 여부에 관해 논의한 뒤 변론을 재

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10일 변론 기일에 변론 재개 사유를 자세히 밝힐 예정이다.

현재 관계자는 "필요에 의해 변론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 권한대행 측이 선고를 앞두고 현재에 변론 재개를 요청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또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 대해서도 선고기일을 연기한다고 했다. 기일은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5일 조한창·정계선·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조한창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정계선·마은혁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했다.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지난해 12월 28일 재판관 3인

을 모두 임명하지 않았다.

이후 한 총리 탄핵소추안 통과로 권한을 넘겨받은 최 권한대행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선출 둑 헌법재판관 3명 중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임명을 보류했다. 임명 보류의 이유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우원식 의장은 지난달 3일 최 권한대행이 마재판관의 임명을 보류한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우 의장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앞서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28일 당시 한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권영세·권성동·나경원, 서울구치소 찾아 尹 면회

나경원, 尹 옥중 메시지 전달
일각선 '옥중정치' 비판 목소리도
이준석 "尹, 사면 요구했을 것"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서울 구치소에 '내란 수고' 혐의로 구속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옥중 메시지를 전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경기도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대통령을 찾아 면회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은 출탄핵, 예산 삭감, 의회 독재로 국정이 마비되는 것을 바라만 볼 수 없었다. 대통령의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런 조치(비상계엄 선포)를 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나 의원은 "국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동안 여러 출탄핵, 예산 삭감, 감사원 탄핵에 이르는 과정을 보면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이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를 찾아 면회했다. (왼쪽부터) 사진은 국회에서 서울구치소로 출발하는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면회 후 취재진과 인터뷰하는 나경원 의원. /뉴스

사실상 의회가 민주당 일당 독재로 진행돼서 국정을 수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대통령 자리에서 책임감으로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란 마음으로 조치했다고 한다"며 "당에 대한 당부는, 당이 하나가 돼 2030 청년들을 비롯해서 국민 여러분께 희망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당의 역할을 부탁했고, 현재 국제 정세와 세계 경제 관련해 나라 걱정을 많이 했다"고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나 의원은 윤 대통령이 면회에서 국회 상황, 현재 재판 과정의 편향적인 부분, 재판관의 편향적 행태에 대한 우려

도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옥중 정치'를 하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나 의원은 "대통령께서 현직이고 정치인이니 당연히 메시지를 내지 않았을까"라며 "이를 옥중정치라고 하기엔 조금 그렇다"라고 선을 그었다.

권영세 위원장은 접견 후 국회로 돌아와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을 만난 것에 대해 "우리 당 출신의 대통령이고 지금은 직무 중일 뿐"이라며 "야당의 어떤 의원이 왜 구치소까지 찾아가느냐고 그러는데, 구치소에 집어넣었으니 구치소로 찾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권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일반적인 이야기로 당이 분열되지 말고, 우파 내에서도 2030 청년들이나 다른 세대 등 다양한 분들이 많이 있으니 그런 분들을 어울려서 당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한편, 옥중에 있는 윤 대통령을 당내 서열 1·2위가 만나고 온 것에 대한 시선이 굽지는 않았다.

김재섭 조직부총장은 오늘(3일) 오전 비대위 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과거에 발목 잡히는 비대위보다는 혁신 경쟁에 뛰어드는 비대위가 돼야 하는데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모습은 아무래도 과거에 매몰되는 느낌이 든다"며 비판했다.

국민의힘 당 대표를 지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YTN 라디오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면회에서 자신의 사면을 요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의원은 "사실, 별로 가서 할 말도 없을 것"이라며 "지금 대통령은 재판 준비하느라 바쁠 거고, 만났을 때 숙제만 잔뜩 안고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결국에는 '젊은 세대' 뭐 이러면서 메시지를 내고, '나중에 선거 꼭 이겨서 나 사면 좀 시켜줘'라는 이야기를 들려서 할 것"이라며 "(면회하러 가서) 숙제만 안고 들어오는 격"이라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崔 대행 "美 고율관세 영향 최소화 위해 가용수단 총동원"

수출기업 5개社와 오찬간담회
수출금융 360兆 공급 등 예정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3일 미국 트럼프 신(新) 행정부의 멕시코·캐나다·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 조치와 관련해 "우리 경제·기업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만간 '비상 수출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출기업 5개사와의 오찬간담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대한 고율의 관세 조치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미국과 다양한 채널로 소통하면서 우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멕시코·캐나다 정부 및 현지 진출 기업과도 지속해서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수출기업 유동성 확보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원의 수출금융을 공급하는 한편 해외전시회·무역사절단 등 수출 지원 사업에 전년대비 40% 증가한 2조90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새로운 협력 기회를 발굴하고 수출 다변화를 위해 아시아·중동·중남미 등 신흥시장까지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수출기업들은 ▲반도체·이차전지 산업 지원 확대 ▲조선업 금융지원 및 환급보증(RG) 한도 상향 ▲해외전시회·수출바우처 지원 확대

등 정부의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

정부는 추가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 및 기관과 적극 협업해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최 권한대행은 "수출 전선에 있는 우리 기업이 정부 지원을 체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이 현장과 지속 소통하고 적극 협업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수출 모멘텀 확대를 위해 이번 달 수출전략회의를 재개하고 범부처 비상수출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엘엔에프·케이조선·동진쎄미켐·대모엔지니어링·코디아 산업 등 5개사 대표가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 권한대행을 비롯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회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서예진 기자

李 "국정협의체 가동해 추경논의 시작하자"

"그동안 與 반대로 실무협의 안 돼 신속한 추경편성을 적극 협조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국민의힘을 향해 "즉시 국정협의체를 가동해 추경 논의를 시작하자"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 위원회에서 "추경에 대한 국민의힘 의지가 진심이라면 즉시 국정협의체를 가동해서 추경 논의를 시작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어제 국정협의체로부터 복귀해서 추경을 논의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일간 말씀의 취지에는 동의하고 환영한다"며 "그동안 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잘 안 된 이유는 국민의힘이 추경을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도 '예산

조기 집행만으로는 부족하다. 하반기 경제둔화가 우려되니 추경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제언했다"며 "지금은 비상 계엄 사태로 급락한 소비 심리와 멈춘 경제 심장을 되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국정협의체에 복귀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언제 탈퇴했느냐"며 "국민의힘은 더 이상 말 바꾸기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또 특히 없는 말 지어내서 거짓말하지 말고, 신속한 추경 편성에 적극 협조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자신들의 추경 거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판에 왜 야당이 불참한 것처럼 얘기를 하느냐"며 "거짓말이 전매특허인지 특징인지 알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서예진 기자